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전북 송전선로 피해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 등 개최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따른 활용방안 다뤄져 “尹 정부 중앙집중 에너지 정책 한계 드러내… 수요 분산 등으로 접근해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 안주·진안·무주군)는 ‘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18일 오전 9시 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시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입법화를 통한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과 토론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박희승 국회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 및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신장성-신정읍-신계동 345kV 송전선로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안호영·박희승 국회의원과, 박용근·윤수봉·박정규·임종명·오현숙·김희수·김성수·권요안·김슬지·김정기·염영선 도의원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수십여명이 참석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고, 기업

경쟁력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전선로 갈등의 대안으로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폐로, 충남권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송전선로 활용방안도 다루어졌다.

또한, 철도구역 접도구역 등 네트워킹과 연계하고 지중화 확대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독일 송전선로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도 공론화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토론회에는 반대 주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되어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안주군·정읍시 송전탑 반대대책위,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등의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송전선로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송전선로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일방적이고 중앙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 ‘수요분산’, ‘기업 지방이전’ 등의 접근과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전북 송전선로 문제는 전북 의원들의 문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민주당의 주요 의제로 공론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18일 오전 9시 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내 학교, 건강체력평가·체력교실 운영 부실”

진형석 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북교육청 미진부서 대상 행감서

최근 3년 동안 도내 초·중·고 282교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의무 사항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교육청 미진부서(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및 제8조 그리고 제9조 등에 따라 각급학교는 매년 의무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저체력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야 하지만, 다수의 학교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체력평가 및 건강교실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독 역시 매우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및 제8조 그리고 제9조 등에 따

라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각급학교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4, 5등급 저체력 학생 및 비만 관장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도내 초·중·고 282교는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147개교는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저체력 및 비만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부 관련 지침이 강화되고 2022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까지 지원받았지만, 도내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4, 5등급 학생 비율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의 학생체력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학생 건강체력평



가 결과 2022년 4, 5등급 학생 비율은 17.98%, 2023년 17.39%, 2024년 17.95%로 나타나 도내 각급학교 저체력 및 비만학생의 비율이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 의원은 “최근 3년 건강체력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2022년 검사 대상 학생은 12만9,878명임에도 실제 검사를 시행한 학생은 12만4,829명으로 5,049명이 누락되었고, 2023년 역시 전체 대상 학생은 12만8,615명임에도 검사를 시행한 학생은 12만6,085명으로 2,530명에 대한 체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제출자료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고창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88.35%, 2023년 진안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50.83%가 4, 5등급의 저체력 학생으로 집계되어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2023년의 경우 도내 지역별 각급학교(초·중·고) 42개 학교급 중 22개 학교급은 저체력·비만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제출되는 등 자료관리는 물론이고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도교육청의 자료제출 부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형석 의원은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데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3차례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자료가 모두 부실하게 제출되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점에서 단순 오류로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다. 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준비가 매우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개발공사만 영업이익률 -8.99%”

도의회 경산건위, 행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8일 제415회 정례회 기간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이재 의원(전주4)은 모항해 나투가족호텔의 작년 영업이익이 한 달에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12년째 외지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꼬집으며,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역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전북개발공사만 영업이익률이 -8.99%로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가장 낮고, 판매관리비는 34.79%로 가장

높은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수익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 구매 실적 관련 기술개발 제품, 여성 기업 제품, 창업 기업 제품, 장애인 기업,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회적 기업 등 제품별 법정 구매 비율이 미달한 점에 대해 내년부터는 전북개발공사가 앞장서서 법정 구매 비율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새만금관광단지 관련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매립 비용 등으로 6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장기 미매각 토지에 대한 전북개발공사의 관심과 준비가 부족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북개발공사가 각종 공모사업 및 국가사업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출장이 지난해에는 총 66회, 올해의

경우 82회 등 출장이 과다한 점을 지적하며, 개발공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전북개발공사 일에 몰두하고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개발공사 내부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알고 있는 지 질의하며, 개발공사 업무 관련 협의가 의회와 전혀 없었던 점, 개발공사 사장의 사적인 부분이 개발공사 직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점 등은 잘 못됐다고 질타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은 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이사회 회의록을 대외비로 판단해 제출하지 않은 점은 어떤 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질의하며, 근거가 규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발공사가 임의로 판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매우 잘못된 점이라고 질타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정례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건 등 총 44건의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일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만)에서 19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서 2025년 부서별 시책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28일에는 군정질문이 실시되고 다음 달 5일 12월달본이 진행된다. 그리고 12월 6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경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고창=김영성 기자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결성선포 및 제2차 도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 이상 못살겠다”…尹퇴진 전북운동본부 결성 전북민중행동 등 도내 6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23일 전주 모래내시장 앞에서 제2차 도민대회

전북민중행동과 전북비상사국회의, 전북교육연대 등 도내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결성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되고, 부자감세 확대와 서민 복지 축소로 사회는 더욱 극단적 양극화로 향하고 있다”며 “물가 또한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파

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파괴, 노동자 탄압, 농민생존권 말살, 경제 파탄, 외교 참사 등을 물고 있는 윤 정권 아래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며 “윤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퇴진 의미를 담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주먹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한편,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전주 모래내시장 앞에서 도심 집회를 하며 2차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염영선 도의원, ‘김건희 특검’ 머리띠 두르고 마라톤 완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도의원(정읍2)이 지난 17일 고창군 일대에서 치러진 제22회 고창고인돌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다.

염영선 의원은 25년 경력의 마라톤 애호가로 이번 대회에 ‘김건희 특검하라’라는 구호가 새겨진 머리띠를 두르고 10km를 완주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월, 제414회 임시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는 염 의원은 “윤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되는 김건희 의혹에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문구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인사 정리 안하면 예산 삭감? 단순 위협 아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노조, 박용근 도의원에 유감 표명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전북 문화관광재단 예산의 50%를 삭감하겠다”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발언이 단순한 위협이 아닌, 전북 도민의 문화적 권리와 수천 명의 예술·관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18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박용근 도의원은 지난 9월부터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에 대해 과도한 자료 요구와 표적 감사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10월 2일과 7일 요구자료 설명을 위한 만남 자리에서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재단 예산의 50%를 삭감하겠다”라고 언급했다는 것.

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전북 도민의 문화향유권과 예술·관광인의 생존권을 흥정 도구로 삼으려는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박용근 도의원의 지적사항 일부는 재단 내부에 의존해 사실 확인 없이 감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인사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돼 왔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전북도민의 문화향유권과 예술·관광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싸움이 아니라, 전북의 문화예술과 관광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근 의원은 “예산은 가지고 협박한 적은 없다. 도의원이 인사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협박할 수 있느냐”면서 “발언의 요지는 자체 내부 인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깨끗하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의회 정례회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일간 일정으로 제20회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제4회 추경정예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과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

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의원 발의 조례 19건과 시장 제출 안건 29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8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한명숙 의원, 손준열 의원, 김정현 의원, 오동환 의원의 시정에 대한 5분 발언과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가 이어졌다. /남원=김기우 기자